

도 '쇄신용 인사' ... 실국장급 사실상 전원 교체

도가 실·국장 대폭 교체와 시·군 인사교류 확대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담긴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빠르면 23일 단행한다.

최문순 도정 2기 증반을 맞아 그동안 불거진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최 지사는 상명하달식 수직적 조직문화를 깨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그동안 복지부동 행태가 만연하고, 일부 측근이 전횡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인사는 조직쇄신 차원에서 단행된다.

실·국장급은 일부 기술직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인사 대상이다.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과 안병현 녹색국장, 김

인사 난맥상 돌파 의지 이르면 23일 단행 ... 명퇴 등 인사폭 커져 핵심현안 담당 '발탁인사' ... 시·군 부단체장 절반 교류대상 거론

지역 동계올림픽본부장, 최형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최근 명예퇴직 했다.

이낙종 감사관, 허남석 강원테크노파크 감사실장은 이달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국장급 장기교육 대상자 3명을 포함하면 10명의 인사요인이 발생한다.

레고랜드 감사 결과로 주의조치를 받은 국장급 3명까지 더해지며 인사폭이 커졌다. 안병현 전 국장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최형규 본부장은 도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이등이 예상

된다. 행정직 국장급 승진은 4~5명 선이다. 노재수 예산담당관, 백승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처장, 오원종 관광마케팅과장 등이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있다.

도는 레고랜드와 지방의료원, 평창동계올림픽, 폐광지역 등 도정 핵심 현안 담당 국·과장은 연공서열 대신 발탁할 계획이다.

2급인 재난안전실장은 기존 국장급 인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녹색국장은 행정직과 녹지직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 공모중인 감사관은 과장급

인사의 승진 발탁설이 나온다. 부단체장은 전체 18개 시·군 중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인제, 화천, 정선, 영월, 홍천 등이 교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도는 과장급 17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예고했다. 21~22일 4배수인 68명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진행해 23일 결과를 발표한다.

6명 전원이 사퇴한 도지사 특보단 인선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위해 도청 내 인재풀에 연연하지 않고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연공서열은 중시하되 발탁인사 확대에 인적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news.co.kr

날아든 '철새'에 지역 중소기업체 줄도산

리뷰 2015 강원경제 (1)건설

한 해 도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웃고 울고를 반복했다. 지역 기업 및 경제인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큰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말을 맞아 건설, 중소기업, 부동산, 수출, 가계 및 물가 등으로 나눠 도내 경제를 돌아본다.

올해도 도내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철새·외지업체 난립, 불합리한 건설시장 관행 등 잇단 악재로 지역 중소기업체의 피해가 계속됐다.

■철새·외지업체 난립=도내 건설업계는 올 한 해 철새·외지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 제한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철새·외지업체의 공격적 진출로 지역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줄도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폐업한 항도 종합건설업체는 총 306개로 집계됐다. 지

수주액 감소·외지업체에 일감 뺏겨 수익성 악화 ... 7년새 306곳 문 닫아 정부 현장의견 반영 없어 침체 가속

난 7월에도 1,0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북선전철 관련 전기공사 8건 중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16.9%인 157억여 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외지업체와 공사발주 전에 전입한 철새업체에 빼앗겼다.

건설수주금액 감소도 계속됐다.

올해 1~11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986억원으로 2012년 1조1,646억원, 2013년 1조3,157억원, 2014년 1조1,190억원 등에 못 미쳤다.

■지역 건설산업 침체=지역 건설시장이 침체된 것은 정부의 건설 관련 정책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도내 각 시·도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정하고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규정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 등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도 발주기관이나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혼란과 반복만 유발했다. 하위윤기자

평창군 예산 19억7,430만원 삭감

군의회 정례회 마감... 진통 끝 '보건의료원 신축' 12억 승인
올림픽 국비지원 사업은 삭감 논란... 군의회 "추경 반영 검토"

【평창】평창군이 상정한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평창군의회가 진통 끝에 26건 19억7,430만원을 삭감하며 제125회 정례회를 마감했다.

평창군의회(의장:유인환)는 지난 18일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6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505억3,569만원 중 '세출예산 26건 19억7,43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켰던 만큼, 부지매

입비 12억원 역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처리됐다.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박찬원 군의원 등 2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안을 발의했고 그 안이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면서 부지매입비 12억원이 겨우 부활돼 승인 가결되는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을 지지하는 평창읍 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60여명이 의회 방침을 신청하는 압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30여명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의회 의결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 이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인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억3,600만원과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1억원 중 각각 군비 부담액인 1억1,800만원과 3억8,500만원이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힘들게 국비를 따왔고, 더구나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어떻게 올림픽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의회는 "종합관광안내시스템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관문에 설치하지 않고 지역의 가장 끝자락인 옛 대관령 휴게소와 빈 공간이 없는 평창전통시장 등에 설치한다는 것은 평창군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며 "대상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추경에 올린다면 반영하기로 군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25@kwnews.co.kr

도, 국·과장급 23일 대대적 인사

강원도가 최근 빚어진 도정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오는 23일 국·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진환 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 2기 최문순 도정 2년차를 맞아 정년퇴직과 명퇴 등으로 발생한 인사수요를 활용, 오는 23일 실·국·과장급과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부지사는 “이번 인사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과감한 발탁인사와 함께 내부 인재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폭넓은 인사교류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문순 도정의 핵심사업인 레고랜드, 동계올림픽, 폐광지역, 지방의료원 등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밝혀 관련 부서장의 대대적인 교체를 예고했다.

시·군 부단체장도 대폭 교체된다.

도는 최성철 삼척부시장, 장대순 정선부군수 등 취임한지 1년 반이 넘는 부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정년을 맞은 동해, 속초, 홍천을 포함해 이번에 모두 9명의 부단체장을 새로운 얼굴로 교체한다. 특히 기술직 서기관의 역량 강화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군 부단체장에 기술직렬 인사를 발령키로 했다. 직렬간 칸막이도 없앤다.

도는 이번 인사에서 행정·기술 복수 직렬인 15개 과에 대해 직렬별 칸막이를 없애는 인사를 단행키로 해 기술직렬의 깜짝 발탁인사도 예상된다.

▶ 관련기사3면 백오인 105in@kado.net

‘최 지사의 남자들’ 권력지형 변화

3년차 조직개편
올림픽준비 초점

전반기 인사 퇴진
새진용 구성 관심

강원도가 오는 23일 도청 주요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최 도정 3년차를 맞아 조직을 추스리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6년은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동시에 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이후를 준비하는 시기다.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은 동계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공존하는 시기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 도정 3년차는 이같은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도정의 2기 전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일부 측근들과 참모진의 역

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일었다.

강원도의회 등 정치권과의 소통부족, 주요 국책현안의 부진 등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최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레고랜드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최 지사가 아끼던 참모들도 자리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최 도정의 2기 전반기 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최지사 주변을 떠나면서 도청 내에는 국회의

원 시절부터 보좌해 온 김용철 대변인과 광태섭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만이 남게 됐다.

유정배 강원도사회적경제센터장을 비롯 외곽조직에 남아있는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최 지사 최측근 인사 대부분이 떠났다.

여기에 서경원 경제진흥국장, 박만수 글로벌통상국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최지사 전반기를 이끌던 참모들도 모두 이

동이에 정태 있다.

최 도정의 전반기 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진용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에서 복귀하는 유재봉 전 문화관광체육국장·장시택 전 총무과장과 김철래 의정관, 박홍용 의사관의 중용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조인복 도인재개발원장은 도의회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일부 과장의 발탁인사도 예정

돼 있다.

최 지사 측근들의 부재로 인한 힘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관심이다.

배진환 행정부지사가 인사를 전담, 상황관리에 나서고는 있지만 힘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최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결과는 특보단 등 차기 참모진 구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 도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전면적인 쇄신인사를 통해 도정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측근 인사들도 최순순 도정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사심없이 도지사를 보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오인



五山家 깊은 지하 강내 옥벽에서
응출되는 천연염카리수 옥정수(玉井水)

목산가

주문전화 1544-0741
Fax 033-242-4612

五山家 대일광업(주)

‘중심제 전면 시행 앞두고 일부 발주처 ‘무리수?’

최저가 대형공사 ‘밀어내기’ 의혹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발주기관들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대형 건설공사도 ‘밀어내기’ 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저가 대비 중심제가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한 발주기관들이 연말을 앞두고 최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심제 시범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주기관마다 상승한 낙찰률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중심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최저가 발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새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를 비롯해 경부선 지천~대구 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이 잇따라 공고됐다.

또한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구간)를 비롯해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

여수신북항·강릉철도기지 등 최근 한달새 발주공고 잇따라 관계기관 협의·민원 등 未해결 “재정절감 혈안, 부실우려” 지적

프 구조개선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1단계) 등 최저가 방식의 계약요청도 연일 쇄도하고 있다.

모두 내년 이후에나 개찰돼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물량들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중심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2~3개월은 최저가의 명맥을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일부는 발주자가 중심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밀어내기’ 식으로 발주한 물량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나 설계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계기관 협의나 민원문제 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사실 해마다 연말이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려는 발주자들의 공사발주가 증가해왔다.

하지만 올해처럼 최저가 방식의 대형공

사 발주가 몰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는 중심제와 최저가 간 낙찰률 차이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즉, 같은 공사라도 중심제가 아닌 최저가로 집행하면 적어도 5~6%, 많게는 10%(예정가격 기준, 설계변경 배제)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연내 공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번거로움도 밀어내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는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밀어내기 발주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발주자는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은 중심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런 공사의 경우 시공적자는 물론, 설계상 오류나 추가협의, 민원해결 등에 따른 공기 지연 사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줄이거나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최저가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발주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품질과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d@

허위·부실 감정... 공사비 분쟁 판결 ‘신뢰 추락’

〈鑑定〉

‘유령’ 사무실·하도급·뇌물 기승 법원 판단 근거, 되레 불신 키워

공사비 분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실 감정으로 신뢰성을 잃고 있다. 허위 주소지로 활동하는 감정인이 있는가 하면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한 허위 감정 결과가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고, 소송 당사자에게 돈을 받은 감정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Y건설은 지난 2011년 자동차 내장재 제조가 주력인 D그룹의 자회사인 I사와 강원도 고성군 죽암면 문암

진리 소재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끝난 후 추가공사비용 등 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건축주인 I사는 하자 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I사는 Y건설에 공사대금 2억483만1600원을, Y건설은 I사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2억9505만60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건설 입장에서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9022만4408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역올한 생각에 Y사 대표 K씨는 소송에

서 감정을 맡았던 S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소지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있었고 S건축은 찾을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몇 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무슨 말이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무실도 없이 허위주소로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가 8억여원이 걸린 민사소송에 감정인으로 나선 것이다. K대표는 또 이 감정인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감정을 하도급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정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정석기자 jskim@ ▶2면에 계속

【 2015.12.21(월) 건설경제 】

1면서 계속=허위·부실 감정... 공사비 분쟁 판결 '신뢰 추락'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광역시 S건축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 감정인이 허위 사업지를 통해 감정행위를 했고, 타인이 감정을 대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정인 지정 중역을 시켜놓은 상태”라며 “문제가 된 감정인이 내년도 감정인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정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소송 관련 감정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다.

부산지방법검찰청은 지난 10월 공사비 소송에서 금품을 받은 감정인을 적발하기도 했다. 모텔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혐의다.

이 감정인은 소송 감정 5건을 하도급 줬는데 부산지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는 허위감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험이 전혀 없이 ‘감정 일을 처음 배워본다는 차원’에서 맡아 타 업체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고 부산지검은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이 터지자 부산지방법원은 감정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발표

하기도 했다.

건설 관련 소송에서 재판장이 감정인 평정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에게 부적격 감정인을 보고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법원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정인 선정 때 면접 심사를 하고 건설 관련 소송에서는 전문심리관이 감정을 하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적발된 부산지법 이외에서는 구체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산지법의 방안이 전국 법원에 공유돼 시행될 것”이라며 “이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입법 조치인데 전문심리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오늘의 주요 일정

▶기재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전문직위제 도입

▶산업부,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2016년 신규과제 공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위해 브로커·건축주까지 처벌 강화해야”

건산연, 부당이득 환수·검증시스템 구축 등 주장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최근 발간한 '시장구조 왜곡하는 불법 면허 대여-근절 방안 없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건설업 등록 대여업자들은 부실한 건설사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설립한 후 1~2년 정도 활동한 후 회사를 부도내고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행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대여업자는 물론 알선자, 건축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건축주 처벌의 경우 공모 또는 묵인 여부에 따라 수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적발 시 위법행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법 대여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업체나 혐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동일업체 명의의 과다 착공사례에 대한 검증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전국 건축물

착공신고 현황을 관련 협회에 제공해 혐의업체를 선별하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제재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또 불법 대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조직적인 경우에는 건설업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인허가나 준공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도 주문했다.

먼저 착공신고 단계에서는 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배치기술자와 건설업체의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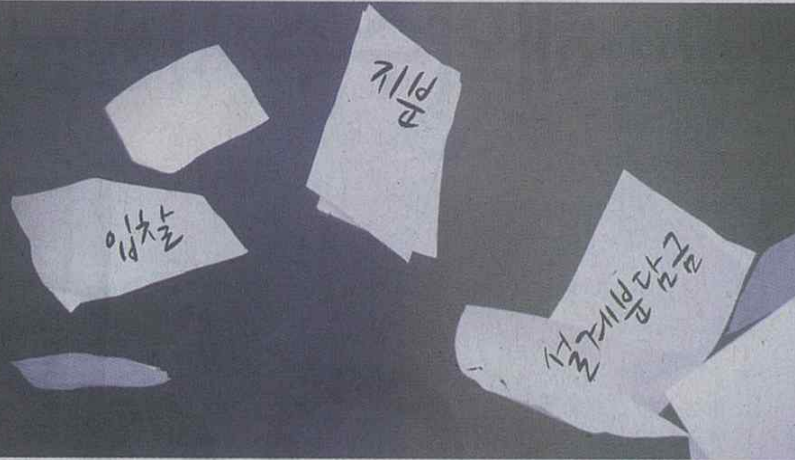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해당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업체 명의의 하자보증증서가 첨부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는 공사 중단, 하자 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대여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여서 실제 불법 규모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현장배치 기술자에 관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분양이나 매매 목적의 건축물에서는 불법 등록 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기술형입찰공사가 급증하면서 대표사 참여예정 건설사들의 복잡한 셈법과 치열한 눈치작전에 말려 지역,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사의 선택에 따라 수개월간 계획했던 입찰참가 기회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어렵사리 참가하더라도 예상했던 지분율이 '반토막'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대형 기술형입찰 물량 급증으로 시장 활기 띠지만...

지역·중소업체 웃지 못하는 이유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소각 및 매립시설과 물산업 클러스터, 울릉공항 1, 2공구 등 기술형입찰공사 발주(예정)물량이 급증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주로 구성원사로 참여하는 중견이하 중소, 지역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입찰참가 및 일정 지분참여를 계획했던 것도, 대표사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지역건설사는 최근 모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입찰에 구성원사로 참여를 계획했으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앞두고 대표사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렸다.

또 다른 한 중견사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애초 참여하려던 공사가 아닌 다른 입찰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예상했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사가 재차 선택한 공사는 지역의무비율 적용대상으로, 지역업체들을 포함시키다보니 이 업체의 지분율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중소, 지역사들은 비단 이런 사례뿐 아니라 대표사의 선택에 따라 옮겨다니다 자칫 거둬들인 유찰사태를 맞기라도 하면 애꿎은 설계분담금만 날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요즘처럼 입찰물량이 많은 경우 구

대표사 사업참여 선택 따라 입찰기회 잃거나 지분 반토막 설계분담금 날리는 사례 속출 대표사-구성원사 간 소통 필요

구성원사들의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대표사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경쟁관계나 수익성(예측)에 따라 목표사업을 변경하거나, 대표사 간 분리 및 통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한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물량이 늘어 대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부담스러운 경쟁을 피하려는 대표사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도 활발해져 구성원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며 "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대표사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구성원사로서는 입찰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때아닌 유찰에 휘말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표사 및 구성원사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종 선택권은 결국 대표사에 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구성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소한의 결정권과 시간적 여유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표사만 믿고 '묻지마'식 지분을 요구하며 매달렸던 일부 구성원사들의 잘못된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낙찰률이 높은 기술형입찰이라 해도, 입찰과정 못지않게 수주 후 적정 실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입찰 준비 과정에서부터 대표 및 구성원사 상호간에 긴밀한 소통관계를 구축해야 서로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준조합원 제도’ 도입 놓고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 ‘신경전’

‘준조합원’ 제도 도입이 보증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준조합원 도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공제조합(건공)과 서울보증보험(서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건공은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관련된 업체를 준조합원으로 영입해 보증 문턱을 낮추려면 결국 조합원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은 조합원 경계를 허물면 ‘제2의 보증보험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아 시장이 혼탁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준조합원’ 도입을 담은 건설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안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보험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서보가 공제조합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서다.

개정안은 지난 11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결돼 통과됐다. 다만 국토위 의결 과정에서 준조합원이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 보증·대출·보험에서 ‘보증’으로 축소되고, 준조합원 대상도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 발주자로 한정됐다.

건공은 건설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조합원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조합원으로 영입할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영세하고

‘찬성’ 건설공제조합 보증문턱 낮추면 조합원 수혜 건설업 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반대’ 서울보증보험 제2보증보험사 설립과 같아 시장 혼탁해질 가능성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국내 유일한 민간 보증기관인 서보가 보증을 기피, 보증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사회적 약자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공급하면 건설업 생태계상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건공의 주장이다.

중소 건설사가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제공하면 해외 건설업 지원 활성화도 가능하다. 건공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수주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다”면서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주자도 준조합원으로 끌어들이면 민간공사 지급보증을 발급할 수 있어 시공사인 조합원을 보호한다. 서보는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리스크를 이유로 발급 실적이 거의 없어 연간 2건, 26억원에 그친다고 건공은 밝혔다.

준조합원 도입 담은 건설법 개정안 진행 경과

6월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7월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서울보증보험 반대의견 제시
10월	반대의견 반영해 공제·음자 제외, 보증대상도 축소 조정
11월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12월	법제사법위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

준조합원 도입에 대해 금융위와 서보는 “건공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돼 건설업자 간 협동조직인 건공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사실상 보증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보험사와 달리 금융 관련 법령 적용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배제되는 등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여기에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중 ‘규제로 인한 경쟁상 혜택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서보 관계자는 “말이 준조합원이지만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보증사 역할을 하면 시장이 혼탁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건공 관계자는 “서보가 보증사각지대에 놓인 준조합원에 대해 저신용, 고위험을 이유로 보증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원정호기자 won@